

# 지난해 전남 20대, 1만994명 고향 떠났다

## 전남 22개 시·군 중 17개 '소멸위험' 높아 서동용 '정책자료집' 통해 지방 위기 지적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이 20일 국정감사를 맞아 지방소멸위험지수, 20대 수도권 순이동 인구, 4차 산업관련 일자리 지역별 현황, 지역별 대학 등록률 등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실태와 지방소멸위기의 원인과 대안이 담긴 정책자료집 "2021 대한민국 격차지도, 지방소멸의 위기와 지역격차"를 발간했다.

서 의원은 이 자료집에서 지방소멸위험지수 분석을 통해 지방소멸의 위기를 진단했다. 서 의원은 2021년 8월 말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30년 후 전체 시군구 229개 중 107개(46.7%)가 소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 전북, 강원, 경북지역의 소멸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22개 중 17개, 전북은 14개 중 11개, 강원

은 18개 중 16개, 경북은 23개 중 19개 기초자치단체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감소위험은 2011년 전국의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이 67개로 29.4%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위험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방소멸 위험은 특히 20대와 30대의 순이동 인구를 통해서도 확인됐다. 2011년 수도권의 순이동 인구는 8천450명 줄었으나, 2020년에는 8만7천775명이 늘었다. 이 중 20대의 순이동이 많았다. 2011년 20대는 수도권으로 4만3천351명이 이동했지만, 2020년에는 8만1천442명이 이동했다. 특히 2020년 전남, 경남, 경북에서 유출된 20대가 많았다. 전남은 1만994명, 경남은 1만6천420명, 경북은 1만5천662명의 20대가 지역을 떠났다.

지방과 수도권은 일자리 격차도 컸다.



무엇보다 질 좋은 일자리와 4차 산업혁명 관련 일자리의 격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산업체의 47.0%가 수도권에 몰려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지역내총생산의 절반 이상인 52.0%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다.

인구감소와 더불어 지방대학의 위기도 심화되고 있다. 2020년 대학교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수도권이 1천803만4천원, 비수도권이 1천458만4천원으로 차이가 있었다. 전입교원 1인당 연구비 또한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이 적었다. 중앙정부의 고등교육 지원에서도 격차가 있었다. 연구개발비 지원의 경우 서울이 전체 연구개발비의 43.7%를 독식했다.

인구감소로 강원, 경남, 경북, 전남, 전북의 4년제 대학의 2021학년도 신입생 등록률이 90%에 미치지 못하는 등 지방대학의 위기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지방을 중심으로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이 떨어진 것은 2020년에 비해 인구감소의 폭이 컸기 때문이다. 2021년은 최초로 대학 진학 연령대인 2002년 출생아수가 50만명대에서 40만 명대로 떨어진 해였다. 그리고 앞으로 10여년간 40만명 중후반대 대학진학인구는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3년 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2032년이 되면 인구감소가 다시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다시 한번 위기가 올 것으로 예상됐다.

서동용 의원은 "10년 뒤 인구절벽과 함께 지방소멸은 물론 교육문제까지 급격한 사회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10년 뒤 인구감소의 미래를 알고 있는 만큼, 새로운 기획과 제대로 된 준비로 준비한다면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지방소멸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로 '고등교육제정의 지방역투자', '평생교육강화 및 전문대의 역할 조정', '부실 4년제 대학 구조조정', '지방 국립대 중심의 콤팩트 시티'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 '국가공동체 주치의' 존재감 뚜렷

국감 인물

###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

올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국가공동체 주치의'로서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의 존재감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한빛원전 부실시공부터 전자파 안전성 우려 제품 관리, N번방 사건 이후 불법촬영물 관리 사각지대 등 안전 관리 소홀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한빛원전 5호기 부실 용접 사건과 관련하여는 하청업체 조장의 자격시험 대리 응시와 규정에 맞지 않은 용접봉 사용, 규제기관의 누락 대응 등을 집요하게 추궁했다. 또 국내 용접제조사 대리점 K사 등을 직접 조사한 결과, 용접에 사용된 제품과 원래 규격제품의 가격차가 5-6배 정도 차이가 난 점을 밝혔다. 이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은 관리 책임을 인정하며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또한 시민의 삶에 밀접한 민생 현안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네이버·배민(배달의민족)·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서의 악의적 리뷰, 허위·기만 정보, 별점 테러로 힘들어하는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속사정을 살폈다. 이 의원은 플랫폼 기업의 관리 의무를 명시한 '허위정보 별점테러 피해방지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방위위의 협조와 플랫폼 기업의 개선 의지를 약속받았다.

인터넷·휴대폰 등 결합상품 판매 시 대형 TV 등 100만 원대 과다 경품이 제공된 실태로 소비자 역차별이 발생하는 문제에도 집중했다.

이외에도, 외주제작사 프리랜서 피디들의 열악한 노동 현실 개선을 위한 KBS의 상생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지역 MBC 방송국 경영난과 소액주주문제 ▲KBS 보직자 지역별 편차 문제 등을 비판해 언론의 조명을 받았다. /김진수기자

# 李 “국힘에 굴복했다면 ‘500억클럽’ 됐을 것”

## 대장동의혹 재차 반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0일 “국민의힘 강요에 굴복했다면 ‘500억 클럽’이 아니라 ‘500억 클럽’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방해하지 않았으면 9천억원대라고 하는 개발이익을 성남시가 다 취했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그 외에도 고군분투해서 70%를 환수했다. 5천800억원을 환수했기 때문에 현재 가치로 따져도 60%를 환수했다”며 “이는 대한민국 행정사에 유례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파크뷰 특혜분양, 분당 정자동 사업을 보면서 반대운동 하다가 구속도 됐지만, 그래서 대학원에서 연구도 했고, 인허가권을 통해서 얼마든지 환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그래서 제가 토건 세력들과 원수가 됐다”라고도 했다.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실무진의 초과이익환수 조항 권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자신의 발언을 두고 야권이 배임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제가 그때 의사결정을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최근에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이런 얘기가 내부 실무자 간에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며 “권의를 받았는지 제안을 했는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를 제가 모른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야권에서 ‘측근’이라고 주장하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임명 과정에 대해서는 “본부장 임명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인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 이어 “제가 불법적으로 뭘 했을

리는 없고”라며 “인사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겠다.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라고 부연했다.

또 이 후보는 ‘유 전 본부장은 내 말이 곧 이재명 말이라고 주민들에게 이야기했다’며 유 전 본부장과 관계를 추궁하는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의 질의에 “만약

당시에 정말로 유동규에게 권한을 줬서 유동규가 주도적으로 개발하게 하려 했으면 유동규를 사장 시켰을 것이다. 그런데 본부장 아니냐”라며 “유동규를 통해서 제가 몰래 할 이유도 없고, 도시개발사업이 공식적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주도적으로 했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 “전북대 지역인재전형, 광주·전남 포함해야”

### 윤영덕 “호남 인재 광주·전남·전북 함께 육성 필요”

전북대 의학계열 지역인재전형 선발 범위를 현재의 전북 뿐 아니라 광주와 전남을 포함한 전체 호남권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9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영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갑)은 “전북대와 조선대는 의학계열 지역인재전형에 광주와 전남, 전북까지 포함시키는 반면 전북대는 전북으로만 국한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전북대의 지역인재전형 지역 범위를 광주와 전남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북대 김동원 총장은 “총장 취임부터 지역인재전형 지역 범위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조만간 지역인재전형 지역 범위를 호남권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했다.



지난 2월 지방대학 성법 개정으로 오는 2023학년도 대학입학 전형부터 지방대 의학 및 간호계열의 지역인재 선발이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강화된다. 이에 전남대학교는 2023학년도 입학전형에서 의학계열 지역인재 선발비율을 60% 이상 확대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완화했다.

윤영덕 국회의원은 “광주와 전남, 전북이 호남이라는 큰 틀 안에서 대학교육과 지역인재 육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전북대 지역인재전형 지역 범위를 광주와 전남으로 확대해 호남의 우수인재를 광주와 전남, 전북이 공동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수기자

## 송영길 “개발이익 환수...특별법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0일 “대장동 논란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성과는 여야가 합의해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단체 간담회에서 “대장동 논

란으로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여야 공감대가 만들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선후보를 중심으로 공공이 부동산 개발이익을 일정 부분 이상 환수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그린알로에

# 그린궁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